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 11.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 목 차 】

※ 2026년도 예산안 검토의견 요약

I.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1. 예산안 개요	1
가. 세 입	1
나. 세 출	2
2. 예산안 부문별 내역	3
가. 세 입	3
나. 세 출	4
3.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	9
가. 세 입	9
나. 세 출	10
II.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5
1. 재외동포 지원	15
가. 프로그램 개요	15
나.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17
다. 동포간담회 개최	21
라.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4
마.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8
바.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36
사.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39
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43
2. 재외동포 행정지원	48
가. 프로그램 개요	48
나. 인건비	50
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3

【2026년도 예산안 검토의견 요약】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증액	감액	주요 검토의견
재외동포 지원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377	-	-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의 체계적 확대 및 내실화 필요
동포간담회 개최	1,799	-	-	○ 해외순방 연계 동포간담회 예산 집행체계 개선 필요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3,175	-	-	○ 포상금 지급근거의 명확화 및 제도적 정비 필요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78	-	-	○ 재외동포교육 사업의 면밀한 사업설계 및 추진 관리 강화 필요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지연 해소와 예산집행 효율화 대책 마련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445	-	-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8,570	-	-	○ 해외위난동포 지원 사업의 예산구조 개선 및 집행체계 합리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7,656	-	-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 현실화 필요
재외동포 행정지원				
인건비	10,898	-	-	○ 재외공관 동포업무 전담체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4,601	-	-	○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I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단위: 백만원)

관	항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1,026	1,015	△11	△1.1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1	-	-	금융기관 이자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1,000	1,000	-	-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반납금 등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20	9	△11	△55	증명서 등 영사 민원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5	5	-	-	물품 매각 등 수입금

* 재외공관 세입은 외교부에서 일괄 징수 후 국고세입, 재외동포청은 국내세입만 징수 예정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0억 2,600만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세 출

1) 기능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063	109,164	2,101	2.0
일반지출	107,063	109,164	2,101	2.0
인 건 비	10,214	10,898	684	6.7
기본경비	5,856	6,329	473	8.1
주요사업비	90,993	91,937	944	1.0

* 2025년 예산 현액 대비 21억1백만원 증액(2.0%)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91억 6,400만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1,070억 6,300만원 대비 21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예산안 부문별 내역

가. 세 입

(단위: 백만원)

관	항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비고
					(%)	
11						
재산수입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1	-	-	
12						
경상이전수입						
	59					
	기타경상이전 수입	1,000	1,000	-	-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5					
	면허료 및 수수료	20	9	△11	△55	
	69					
	잡수입	5	5	-	-	
소관 합계		1,026	1,015	△11	△1.1	

나. 세 출

1) 성질별 · 사업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1. 인 건 비	10,214	10,898	684	6.7
2. 기본경비	5,856	6,329	473	8.1
3. 사 업 비	90,993	91,937	944	1.0
- 계속사업(19건)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452	377	△75	△16.6
동포간담회 개최	1,750	1,799	49	2.8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2,652	23,175	523	2.3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7,757	23,778	△3,979	△14.3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582	582	-	-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133	5,916	△217	△3.5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340	1,445	105	7.8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2,649	1,732	△917	△34.6
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2,350	334	△2,016	△85.8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10,069	8,570	△1,499	△14.9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	7,656	7,656	순증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17	1,569	△348	△18.2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253	6,358	105	1.7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1,538	1,593	55	3.6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1,045	1,045	-	-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51	51	-	-
공보·홍보 역량강화	1,859	1,296	△563	△30.3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696	60	△636	△91.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900	4,601	2,701	142.2

2) 프로그램 · 단위사업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107,063	109,164	2,101	2.0
5000 재외동포 지원	86,538	85,980	△558	△0.6
5031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2,202	2,176	△26	△1.2
503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50,409	46,953	△3,456	△6.9
503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582	582	—	—
5034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472	9,427	△3,045	△24.4
5035 (재외동포 보듬기)	10,069	16,226	6,157	61.1
5036 (편리한 동포 생활)	9,708	9,520	△188	△1.9
5037 (국내동포 정착지원)	1,096	1,096	—	—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20,525	23,184	2,659	12.9
7101 (인건비)	10,214	10,898	684	6.7
7111 (기본경비)	5,856	6,329	473	8.1
7121 (재외동포청 업무지원)	4,455	5,957	1,502	33.7

3) 국고보조금 사업

<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총 계	867	2,303	1,436	165.6	
민간경상보조	181	181	-	-	■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지자체경상보조	686	2,122	1,436	209.3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안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26년도 예산안 총액은 23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2026년부터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예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되었기 때문임.

□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다문화동포 지원 및 국내 동포 관련 단체 지원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 민간경상보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전년대비(B-A)		비 고
			증감	%	
총 계	181	181	-	-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다문화동포 지원)	130	130	-	-	■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 지원
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51	51	-	-	■ 국내동포 관련 민간단체 지원

□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는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의 내역사업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 지원과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사업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2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자체경상보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전년대비(B-A)		비 고
			증감	%	
총 계	686	2,122	1,436	209.3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시설운영비 지원)	-	1,436	순증	순증	■ 보건복지부 이관 ■ 인천사할린동포회관, 경북 대창양로원 시설운영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686	686	-	-	■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정착 지원

3. 세입 · 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

가. 세 입

< 2026년도 재외동포청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관	항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1,026	1,015	△11	△1.1	
재 산 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	1	-	-	금융기관 이자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1,000	1,000	-	-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반납금 등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20	9	△11	△55	증명서 등 영사 민원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5	5	-	-	물품 매각 등 수입금

2026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10억 2,600만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1) 2026년도 정부 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입예산안은 674.2조원이 편성되어, 이 중 재외동포청 소관 10억 1,500만원의 비중은 0.000152%임.

나. 세 출

1) 예산안 총괄

< 2026년도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063	109,164	2,101	2.0
일반지출	107,063	109,164	2,101	2.0
인 건 비	10,214	10,898	684	6.7
기본경비	5,856	6,329	473	8.1
주요사업비	90,993	91,937	944	1.0

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21억 100만원 (2.0%) 증액된 1,091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²⁾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77억원), 입양동포단체 지원사업(1억원)과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예산 등 주요사업비는 9억 4,400만원이 소폭 증액(1.0%)되는 한편, 재외공관 직무파견 등을 위한 인건비(6.7%) 및 기본경비(8.1%)가 증액 편성됨에 기인하는 것임.

2) 2026년도 정부 총 세출예산안은 728.0조로, 전년대비 54.7조(8.1%) 증액되었음. 이 중 재외동포청 소관 1,091억원의 비중은 0.014%임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정부 총 세출예산은 673.3조원이며, 재외동포청 1,071억원 비중은 0.016%임)

2) 재외동포청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재외동포청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①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편익 증진, ② 부처별로 산재된 동포 관련 업무와 예산의 일원화, ③ 동포 청년의 국내 정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 ④ 디지털 행정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재외동포청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한글·문화·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전 세계 한글학교의 역량 강화 예산을 9억원(5%) 증액하였고, 재외동포 민원 등 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년대비 1억원(1.7%) 증액하였음.

부처별로 분산된 동포 업무 및 관련 예산을 일원화하여 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 입양 동포들의 권익 신장 강화를 위한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예산을 1억원(11.9%) 증액하였음.

우리나라의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학업 장려와 취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동포 인재를 육성하고 국내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 3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한편,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해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신설 예산 2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3) 세출예산안의 구성 및 특징

가) 개 요

세출 예산안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6.7% 증액된 109억원, 기본경비는 8.1% 증액된 63.3억원, 주요사업비는 1.0% 증액된 919.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량적 편성이 어려운 인건비, 기본경비는 전체예산의 15.8%에 해당하는 172억원임.

나) 2026년도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내역

2026년도 재외동포청 프로그램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원(2.0%)이 증액되었음.

<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107,063	109,164	2,101	2.0
재외동포 지원	86,538	85,980	△558	△0.6
재외동포 행정지원	20,525	23,184	2,659	12.9

전년 대비 증액된 프로그램의 내역을 보면,

① ‘재외동포 지원’은 전년 대비 5.6억원($\Delta 0.6\%$)이 감액되었고, ② ‘재외동포 행정지원’은 26.6억원(12.9%)이 증액되었음.

프로그램별로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Δ 한인 정체성 함양, Δ 재외동포 편익증진, Δ 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5.2억원,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억원,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76.6억원이 순증되었음.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법정 의무사항인 보안관제센터 구축 예산이 반영되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4.7억원, 인건비 6.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Ⅱ.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재외동포 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7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6년도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5000]재외동포 지원			82,394	82,394	79,248	86,538	85,980
	[5031]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782	782	490	2,202	2,176
		[301]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782	782	490	452	377
		[302]동포간담회 개최	-	-	-	1,750	1,799
	[503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45,948	45,948	44,161	50,409	46,953
		[301]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2,194	22,194	21,289	22,652	23,175
		[302]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54	23,754	22,872	27,757	23,778
	[503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728	728	645	582	582
		[301]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728	728	645	582	582
	[5034]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0,617	10,617	9,596	12,472	9,427
		[301]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549	6,549	6,018	6,133	5,916
		[302]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610	1,610	1,571	1,340	1,445
		[303]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2,458	2,458	2,007	2,649	1,732
		[304]재외동포 소통플랫폼 구축	-	-	-	2,350	334
	[5035]	재외동포 보듬기	8,932	8,932	8,975	10,069	16,226
		[301]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8,932	8,932	8,975	10,069	8,570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302]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	-	-	-	7,656
	[5036]	편리한 동포 생활	15,387	15,387	15,381	9,708	9,520
		[301]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59	2,159	2,073	1,917	1,569
		[302]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1,657	11,657	11,751	6,253	6,358
		[303]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1,571	1,571	1,557	1,538	1,593
	[5037]	국내동포 정착지원	-	-	-	1,096	1,096
		[301]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	-	-	1,045	1,045
		[302]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	-	-	-	51	51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한글학교 역량강화 9억원, 재외동포 교육사업 31억원,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1억원, 온라인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77억원이 순증되었음.

나.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동 사업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 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7,500만원이 감액된 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490	452	507	377	△75	△16.6
-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144	199	213	208	9	4.5
- 재외동포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	346	253	194	169	△84	△33.2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의 체계적 확대 및 내실화 필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은 내역사업 「재외동포정책의 이해 및 관심 제고」의 내내역사업으로, 재외동포청이 국내 초·중·고교 및 대학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역사, 정책, 정체성, 그리고 모국과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동 사업은 재외동포정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아닌 국내 일반 국민, 특히 학령기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에 비해 다소 증액된 4,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0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사업추진비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20	35	66	41	6	17.1

동 사업의 교육 대상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학교별 요청 주제에 따라 강연자를 배정하고 있으며, 강연은 재외동포청 직원과 외부전문가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2024년에는 22개교를 대상으로 총 27회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63개교 70회 시행(44회 완료)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 시행 세부내역 >

구 분	2024년		2025년	
	학교 수	교육 수	학교 수	교육 수
대학교	5개교	9회	14개교	20회
고등학교	5개교	6회	5개교	5회
중학교	3개교	3회	15개교	15회
초등학교	9개교	9회	29개교	30회
계	22개교	27회	63개교	70회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2026년도에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총 90회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강의자료를 정비·보완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 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또한,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교육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직무교육용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시민대상 교육을 추진 중임.

현재 동 사업은 교육 주제와 강연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 한정된 일회성 강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인식 제고의 실효성이 낮은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교육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공무원·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교육 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오프라인 중심의 현장 강의 외에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교육 및 상시 학습

체계를 병행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 확산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교육성과를 단순 시행 횟수가 아닌 교육의 질적 수준과 인식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강의 방식에 대한 평가체계 및 피드백 시스템을 정립하고, 강의별 만족도 조사·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한편, 2025년 상반기 교육 시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회 중 20회가 재외동포청 소속 직원에 의해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경험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도 동포청 소속 직원을 적극적으로 강연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동포청 내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강사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주제별 맞춤형 강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다. 동포간담회 개최

동 사업은 정상 및 총리의 해외 방문 계기에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사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동포간담회 개최	-	1,750	1,750	1,799	49	2.8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외교부의 「정상·총리 외교」 사업비 일부를 이관하여 재외동포청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며, 202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1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해외순방 연계 동포간담회 예산 집행체계 개선 필요

「동포간담회 개최」 사업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일정에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동 사업은 2025년도부터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어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정상 동포간담회 11회, 총리 동포간담회 4회 개최를 기준으로 총 1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동포간담회 개최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동포간담회 개최	-	1,750	1,799	49	2.8
정상 동포간담회	-	1,523	1,569	46	3.0
총리 동포간담회	-	227	230	3	1.3

재외동포청은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연계된 행사의 특성상, 안보 및 외교상 기밀이 포함된 항목의 공개 예산 집행에 따른 제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음.

실제 정상 동포간담회는 대통령 및 수행원의 이동 동선, 숙소 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공개 예산 방식으로는 기밀 유지에 한계가 있어 행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보안 유지와 신속한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동포간담회 개최 예산 비목별 비교 >

(단위: 백만원)

사업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동포간담회 개최	1,750	1,799
-일반수용비(210-01)	233	23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4	4
-임차료(210-07)	1,060	1,103
-일반용역비(210-14)	230	230
-국외업무여비(210-02)	153	153
-업무추진비(240-01)	70	70

(자료: 재외동포청)

동 사업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기 이전인 외교부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은 III급 비밀 예산으로 편성·집행되어 왔으며, 정상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라는 동일한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공개 예산으로 전환되어 예산 집행의 일관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간 동일한 행사 성격을 고려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비공개 예산 또는 제한공개 형태의 집행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재외동포청은 향후 동포간담회가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안 유지가 가능한 예산 집행체계를 마련하여 행사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동 사업은 재외 한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한글학교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억 2,300만원이 증액된 23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1,289	22,652	22,852	23,175	523	2.3
-한글학교 역량 강화	17,520	18,619	18,641	19,546	927	5.0
-한글학교 교사 육성	2,258	2,685	2,641	2,641	△44	△1.6
-스터디코리안 운영	502	277	159	159	△118	△42.6
-교육자료 지원	352	432	432	432	-	-
-모국문화 보급사업	261	242	380	-	△242	△100.0
-코리안 페스티벌	317	329	331	329	-	-
-언론인 초청 연수	79	68	68	68	-	-

□ 포상금 지급근거의 명확화 및 제도적 정비 필요

‘재외동포 문학상’은 내역사업인 「코리안 페스티벌」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재외동포와 내국인 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음.

동 문학상은 시, 단편소설, 수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총 13명 내외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대상 500만원, 우수상 250만원, 가작 100만원 등으로 시상하며, 상금 총액은 약 2,950만원 수준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포상금 규모 또한 동일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임.

< 2025년 재외동포문학상 시상 내역 >

구 분	시상인원			수상자별 상금
	시	단편소설	수필	
대 상	1명	1명	1명	500만원
우수상	1명	1명	1명	250만원
가 작	2명	2명	2명	100만원

(자료: 2025년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문)

동 사업은 2022년까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였으나,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부터는 재외동포청이 직접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3)에 근거하여 작품 공모, 접수, 심사, 시상, 홍

보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상금 및 격려금은 '포상금(310-03목)'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금을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 비목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시 그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금액 기준은 하위규정으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시상금은 공익적 성격의 포상임에도 지급근거와 지급한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재 재외동포청의 내부 규정인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3조 및 제8조4)는 포상과 시상의 요건 및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

3)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4)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포상의 요건

- 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재외동포 정책 수행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나. 국정과제 및 재외동포청 핵심과제 추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다.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2. 시상의 요건

- 가.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 나.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 다.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외동포청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한도나 환수기준 등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또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⁵⁾는 부정행위 적발 시 상금 환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재외동포 문학상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심사기준, 지급한도 및 환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8조(표창장의 기록) ①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이 예규에 따라 제작되는 표창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마.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동 사업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9억 7,900만원이 감액된 23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출연금 51억 2,400만원과 사업출연금 186억 5,4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2,872	27,757	20,554	23,778	△3,979	△14.3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사업은 차세대 육성사업, 재외동포 교육사업, 동포 지원사업, 민족교육 육성, 기록전시운영,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통합네트워크 지원,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6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 세출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비고
			(B-A)	%	
계	27,757	23,778	△3,979	△14.3	
1. 인건비	3,821	3,955	134	3.5	
2. 경상운영비	1,169	1,169	-	-	
3. 사업비	22,767	18,654	△4,113	△18.1	
① 차세대육성사업	9,166	9,166	-	-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8,826	8,826	-	-	
-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340	340	-	-	
② 재외동포 교육사업	4,074	7,164	3,090	75.8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3,864	6,109	2,245	58.1	
-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	845	845	순증	신규
-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	210	210	-	-	
③ 동포지원사업	630	630	-	-	
- 세계한인정치인포럼	580	580	-	-	
-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50	50	-	-	
④ 민족교육육성	339	339	-	-	
-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119	119	-	-	
-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220	220	-	-	
⑤ 기록전시운영	154	154	-	-	
-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수집)	100	100	-	-	
- 자료실 운영	54	54	-	-	
⑥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7,203	-	△7,203	△100	
⑦ 통합네트워크 지원	1,201	1,201	-	-	
- 기획홍보	150	150	-	-	
- 통합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운영	1,051	1,051	-	-	

□ 재외동포 교육사업의 면밀한 사업설계 및 추진관리 강화 필요

「재외동포 교육사업」은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단위사업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임.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1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외동포 우수 인재의 학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26년도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재외동포 교육사업	3,664	4,074	7,164	3,090	75.8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3,149	3,864	6,109	2,245	58.1
-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	-	845	845	순증
-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	515	210	210	-	-

동 사업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해외 동포청년 취업지원」, 「중국·CIS 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은 해외의 우수 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 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비, 생활지원금,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정착비를 지원하여 국내 기업 취업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중국·CIS 지역 현지 장학

금 지원」 사업은 현지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동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수학을 돕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중 ‘국내 정착형 초청 장학사업’과 신규로 추진되는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 핵심 증액·신규 편성 항목으로 반영되었음.

국내 정착형 초청 장학사업은 단기 연수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국내 대학(원) 진학과 장기 체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150명을 대상으로 2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학업지원 내용은 어학연수비,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신규사업인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25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 항공료, 자격증 취득비, 초기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됨.

< 재외동포 교육사업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재외동포 교육사업 : 4,074백만원	○ 재외동포 교육사업 : 7,164백만원 (+3,090백만원)
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3,864백만원)	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6,109백만원, +2,245백만원)
- 초청 장학지원 : 253명x15.138백만원= 3,830백만원 (생활지원금, 어학연수, 항공료, 보험료 등) - 현지·국내 재학생, 졸업생 사후관리 : 253명x0.134백만원= 34백만원	- 초청 장학지원(계속) : 253명x15.138백만원= 3,830백만원 (생활지원금, 어학연수, 항공료, 보험료 등) - 현지·국내 재학생, 졸업생 사후관리(계속) : 253명x0.134백만원= 34백만원 - 국내 정착 장학지원(신규) : 150명x14.967백만원= 2,245백만원 (등록금, 생활지원금, 어학연수, 항공료 등)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나.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 (210백만원) - 장학금 지원 : 140명x1.36백만원= 190백만원 - 현지 재학생, 졸업생 사후관리 : 5개 재외공관x20명x0.2백만원= 20백만원	나. 해외 동포청년 취업 지원 (845백만원, 신규) - 취업 지원(국내 정착) : 250명x3.38백만원 = 845백만원 (직업 교육 훈련비, 초기 정착금, 항공료 등) 다.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 (210백만원) - 장학금 지원 : 140명x1.36백만원= 190백만원 - 현지 재학생, 졸업생 사후관리 : 5개 재외공관x20명x0.2백만원= 20백만원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대학 및 기업 등의 산업 수요나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요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학업 및 취업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발기준 또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와 같이 학업 및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줌. 실제로 재외동포 사회의 유학·취업 수요, 국내 대학 및 산업계의 수용 여건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예산이 산출되어, 편성규모와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앞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원대상 및 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의 합목적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지연 해소와 예산집행 효율화 대책 마련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구 재외동포재단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상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 2025년도에는 공사비 명목으로 72억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78억 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150억 1,200만원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액 순감으로 편성됨.

< 2026년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이월]	- [7,809]	7,203 [7,473]	653	-	△7,203	순감

※ 2025년 이월금 중 설계비로 3억 3,600만원 집행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주관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시행기관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99억 7,400만원으로 국고 252억 5,300만원과 재외동포 사회의 기부금 47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사업비 현황 >

(단위: 억원)

사업 기간	2021년까지 기투자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투자계획	계
2021	40.37	71.86	-	-	72.03	115.48	299.74
~ 2025	12.70	71.86	-	-	72.03	95.94	정부 252.53
	27.67	-	-	-	-	19.54	기부금 47.21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그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 편성된 설계비 및 건축비 84억 5,6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2023년도에 설계용역비로 사용된 6억 4,700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집행률이 약 7.6% 수준에 그치고 있음.

당초 2021년 부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후보부지 매입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부지 재검토 및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되었음. 이후 2023년 9월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사업 주체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되었고, 2024년 7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설계 절차가 재개되었음. 그러나 행정 절차 및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25년 현재까지 기본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26년 착공 및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현재 사업은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를 기존 299억 7,400만원에서 374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후 2026년 2월 실시설계 완료, 2026년 6월 착공,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이후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일부는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사업 추진의 실행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2025년 내 총사업비 확정과 실시설계 착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2026년 착공 및 2028년 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됨.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조기 종결,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발주 일정 관리,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 착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26년 이후 공사비 증가 및 설계 변경에 대비하여 재정소요를 사전에 예측·관리함으로써, 2028년 9월 준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

구분	주요내용
'18. 12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최우선 핵심과제
'19.~'20.	「센터 건립 기본구상」,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21.	총사업비 대상사업 선정 및 설계비 12.7억원 교부, 舊 재외동포재단-서울대-시흥시 MOU 체결
'22.	1차 건축비 71.86억원 교부
'22. 9월	舊 재단-서울대, 「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부속 합의」 체결
'23.	설계용역 착수(2월), 일시정지(4월), 사업이관(동포청→협력센터) 및 설계용역 재개(9월)
'23. 10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선금(526백만원) 지급
'24.	설계용역 일시정지(1월), 서울대 건축심의 승인(5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7월)
'24.	서울대 이사회 승인(9월), 계획설계 적정성검토(11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승인(12월)
'24.	2차 건축비 72.03억원 편성('25. 정부예산안)
'25. 현재	설계용역 재개(1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 조건부승인(3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완료(9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9월)
'26. 초	실시설계 완료(2월), 조달청 적정성 검토(3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4월)
'26. 상반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발주(5월), 공사 착공(6월)
'28. 하반기	공사 완료

바.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동 사업은 모국 초청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차세대 인재 발굴, 주류사회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 유대 강화 및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 등 3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571	1,340	2,038	1,445	105	7.8
-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455	400	400	400	-	-
-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867	883	883	988	105	11.9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249	57	355	57	-	-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의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은 재외동포 청년 대상 재외공관 단기 인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거주국과 모국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와 동일한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재외동포 청년인턴	249	57	57	-	-

동 사업은 2024년도에 2억 5,7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약 2억원이 감액된 5,700만원만 반영되면서 인턴 채용 규모도 25명에서 약 5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2026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 규모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정책효과 달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2025년도 재외공관별 청년인턴 선발 현황을 보면, 당초 선정된 5개 공관 중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등 4개 공관에서만 인턴이 선발되었으며, 주남아공대사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공고를 거친 상태로, 선발절차가 완료되

더라도 단기간의 인턴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됨.

< 2025년 재외공관별 재외동포 청년인턴 선발 현황 >

재외공관	선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일본(대)	1	5~12월	영사부 민원 안내
주오사카(총)	1	6~12월	영사 및 동포행사 홍보
주캐나다(대)	1	8~12월	캐나다 한인 이민사 자료 조사 정리 및 기념행사 준비 등
주태국(대)	1	6~12월	영사 및 공관 행사 지원
주남아공(대)	2차 공고 완료		

(자료: 재외동포청)

이처럼 예산 축소와 일부 공관의 선발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의 실질적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책목표였던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층의 국정참여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또한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청은 동 사업의 운영 안정성과 내실화를 위해 2024년도 시범사업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업의 추진체계와 운영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거나 사업의 추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동 사업은 원폭 피해 동포,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을 통해 국격에 걸맞게 동포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일민단 지원」,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다문화 동포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취약동포 보듬기」, 「해외위난동포 지원」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은 2025년 예산 대비 14억 9,900만원이 감액된 85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8,975	10,069	9,069	8,570	△1,499	△14.9
- 재일민단 지원	7,880	8,000	7,000	7,000	△1,000	△12.5
-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343	663	502	314	△349	△52.6
- 다문화동포 지원	167	146	146	146	-	-
- 사할린동포 지원	570	520	449	390	△130	△25.0
- 취약동포 보듬기	-	640	672	620	△20	△3.1
- 해외위난동포 지원	15	100	300	100	-	-

□ 해외위난동포 지원 사업의 예산구조 개선 및 집행체계 합리화

「해외위난동포 지원」은 해외에서 전쟁·자연재해·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의 위기 극복을 돕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2026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210-01) 1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해외위난동포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	(B-A)/A
해외위난동포 지원	15	100	100	-	-

동 사업 예산의 경우 일반수용비로만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품목 중 일부가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일반수용비는 통상 소모성 물품 구입 등 단기적 운영경비 성격으로 제한되는데, 재난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기, 취사도구, 난방기기 등은 내구연한이 존재하는 자산성 물품에 해당하므로 비목상 집행이 불가하거나 회계처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2024년도에는 재외동포단체인 쿠바한글학교의 요청에 따라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물품과 선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일반수용비 1,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발전기는 자산취득의 성격을 갖는 물품으로서 이를 일

반수용비로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목적과 상이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지적된 바 있음.

또한, 2025년에는 미얀마 대지진 발생으로 현지 동포단체가 발전기 등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일반수용비로는 즉시 집행이 불가능하여 현장 대응에 지연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안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⁶⁾으로 일반수용비의 집행범위 확대를 상정하여 찬성 의결을 통해 구호품·취사용품·유류 등을 긴급 지원하였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예산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 2025년 해외위난동포 지원 관련 신청 현황 >

신청자	일 시	신청내역
재미얀마한인회	2025. 4. 7.	구호품(식수, 침구, 생필품 등), 취사용품, 유류 등
재과테말라 한인회	2025. 7. 14.	헬멧, 응급처치 키트 등

(자료: 재외동포청)

이처럼 현행 예산 편성체계는 사업의 목적에 비해 비목 설정이 적정하지 않아, 실제 긴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6)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사업의 성격과 실제 집행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일반수용비 외에 보다 적절한 예산 비목으로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외 거주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물품 지원 등 이전지출 성격의 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해외경상이전(340-01) 등 관련 비목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예산구조의 적정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가 요구됨.

타.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동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고통 받은 사할린한인들이 모국으로 영주귀국 시 초기 정착비 및 입소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6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	-	7,656	7,656	7,656	순증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사업비를 이관하여 재외동포청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요구한 76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예산 현실화 필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후 귀국하지 못한 동포들의 국내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7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76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관련 연도별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사업비	9,104	8,162	8,122	7,656	7,656

※2025년 이전은 보건복지부 담당 예산임

(자료: 재외동포청)

주요 지원내용은 특별생계비(월 7만 5천원), 항공료(1인 45만원) 및 집기비품비(140만원), 임대주택 보증금(1인당 885만원), 안산시 부담금(5억

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9,8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사무국 경비(3억 6,300만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및 경북 대창양로원 시설운영비(14억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귀국자에 대한 항공편 제공, 초기 정착용 생활물품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사업 상세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특별생계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중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아파트 관리비 지원을 통해 정착 지원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영주귀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내에 입국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원을 통해 영주귀국 및 초기 정착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규 영주귀국자 대상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안산시 부담금 지원	안산에 대규모 사할린한인 거주지를 조성하는 대신 국가가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의 안산시 부담금 지원
사무국 경비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지원본부의 사업비,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및 대창양로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중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입소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노후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지원

(자료: 재외동포청)

그러나 동 사업은 장기간 동결된 지원단가로 인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항공료, 임대보증금, 특별생계비 등 주요 지원 항목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구매력과 지원 수준이 크게 낮아진 상태임. 특히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는 특별생계비의 경

우 2000년 이후 25년간 7만 5천원 수준에서 인상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과 고령층의 생활비 증가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

또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024.7.17.)으로 영주귀국 지원대상이 기존 직계비속 1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2024년 452명에서 2025년 722명으로 약 6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으로 인해 실제 영주귀국 지원 인원은 270명에서 23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할린동포 사회의 영주귀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신청인원 및 선정인원>

연도	신청인원(명)	선정인원(명)	선정률(%)	비고
2021	1,079	350	32.4	재외동포청 개청 전
2022	685	350	51.1	
2023	506	270	53.3	개청 후
2024	452	270	59.7	
2025	722	234	32.4	

(자료: 재외동포청)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 이행과 인도적 차원의 국가 책무를 실현하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지원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재외동포청은 장기간 동결된 특별생계비·항공료·보증금 단가를 물가상승

를 및 실제 비용 수준에 맞게 보다 실질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할린 동포법 개정에 따른 영주귀국 희망자 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 행정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청 내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6년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7100]재외동포 행정지원			22,725	22,725	18,345	20,525	23,184
	[7101]	인건비	12,721	12,721	8,451	10,214	10,898
		[101]인건비	12,721	12,721	8,451	10,214	10,898
	[7111]	기본경비	5,683	5,683	5,122	5,856	6,329
		[201]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270	1,270	927	1,240	1,272
		[202]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3	3	3	5	5
		[203]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18	18	12	18	17
		[204]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11	11	10	18	17
		[205]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13	13	12	21	20
		[206]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12	12	12	20	19
		[251]기관운영 기본경비	2,777	2,777	2,274	2,374	2,824
		[252]대변인실 기본경비	33	33	30	33	32
		[253]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188	188	149	188	173
		[254]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1,264	1,264	1,608	1,752	1,747
		[255]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47	47	43	140	147
		[256]교류협력국 기본경비	47	47	42	47	56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4년 예·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7121]재외동포청 업무지원	4,321	4,321	4,772	4,455	5,957
		[301]공보·홍보 역량강화	1,687	1,687	1,695	1,859	1,296
		[302]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300	300	790	696	60
		[303]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34	2,334	2,287	1,900	4,601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중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예산이 27억원 증액되었으며, 재외공관 직무파견 및 청사 임차료 소요 등이 반영되어 인건비 6.8억원, 기본경비 4.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나. 인건비

2026년도 재외동포청 인건비 예산은 재외공관 직무파견 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인건비	8,451	10,214	10,929	10,898	684	6.7

□ 재외공관 동포업무 전담체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2026년도 인건비 예산안에는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청 소속 인력 3명을 직무파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2억 7,500만원, 기본경비 5,000만원을 포함한 3억 2,5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재외공관에는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전무한 상황임.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LA(총), 일본(대), 중국(대), 뉴욕(총), 시드니(총), 알마티(총), 호치민(총) 등 7개 주요 공관에 동포전담 인력(직무파견 형태)을 파견하여 현지 동포사회와의 정책 소통, 민원 대응,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재외동포청이 출범 후 해당 인원이 순차적으로 철수하여 현재 재외공관에는 재외동포 전담 인력이 전무한 상황임.

< 재외동포재단 당시 직무파견 현황 >

공관명	주LA(총)	주일본(대)	주중국(대)	주뉴욕(총)	주알마티(총)	주시드니(총)	주호치민(총)
최초 파견일	'16.10월	'18.10월	'08.8월	'14.2월	'16.3월	'19.12월	'19.12월

이로 인해 동포사회에서는 정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재외동포청 또한 정책 고객인 동포사회와의 직접 접점을 상실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동포 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병행하게 되면서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외동포 분야 전담 주재관 직위 신설 또는 비별도정원에 의한 직무파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음. 현재 주재관 신설 요청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인사혁신처 및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LA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등 주요 거점 공관에 재외동포청 소속 인력을 정원 내 직무파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임.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내 동포업무 전담체계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직무파견을 신속히 시행하여 현장 소통 기반을 복원하는 한편, 현행 직무파견 형식이 한시적 성격의 임시조치에 불과하여 장기적·안정적인 동포정책 수행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

후에는 재외공관 내 재외동포 전담인력 제도를 정식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안정적 반영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에 예방·대응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7억 100만원이 증액된 4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287	1,900	5,220	4,601	2,701	142.2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53	1,803	1,803	1,803	-	-
- 행정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	97	97	97	-	-
- 동포청 관제센터 구축	-	-	3,120	2,701	2,701	순증
- 정보보안 체계 강화	-	-	-	-	-	-
- 업무포털 기능개선	446	-	-	-	-	-
-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650	-	-	-	-	-
- 동포청-재외공관 간 문서유통 개선	638	-	-	-	-	-

□ 재외동포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의 보안관제센터를 신설하여 법령⁸⁾을 준수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동포청 본청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 산하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을 포괄하는 통합 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27억 1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동포청 관제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동포청 관제센터 구축	-	-	3,120	2,701	2,701	순증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안전센터 인프라 구축비로 자산취득비 14억 3,600만원과 공사비 4억 7,600만원 등 총 27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보안관제 용역비 7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세종시에 위치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입주를 전제로, 재외동포청의 자체 보안관제시스템 구축과 보안장비 구매, 상시관제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사이버 보안관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예산으로 파악됨.

8)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 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 동포청 관제센터 구축 사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비목	금액
사이버안전센터 공사 및 보안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1,436 (1회성)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476 (1회성)
보안관제 외부용역	일반용역비	789 (연간)
합 계		2,701

(자료: 재외동포청)

현재 재외동포청은 독립적인 보안관제시스템이 부재함에 따라 본청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일부 의존하고,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분산된 체계는 침해사고 대응 및 보안위협 식별 과정에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접속 비중이 높은 재외공관 관련 시스템의 특성상 사이버공격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합적 보안관제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운영시스템별 보안관제 현황 >

소관	운영시스템	보안관제
재외동포청	코리안넷, 한상넷, 스테디코리안	재외동포협력센터 (산하기관 재 위탁)
	영사민원시스템(G4K)	미 관제 (2024년까지 외교부 담당)
	업무포털, 홈페이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e-아포스티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외동포협력센터	대표 홈페이지	보안관제 업체 원격관제 수행
	재외동포 자료실	
	사업지원시스템	
	단체관리시스템	

(자료: 재외동포청)

정부는 이러한 중소규모 기관의 보안관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인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청도 해당 센터에 입주하여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이를 통해 사이버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차단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입주 및 관제센터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역할 조정과 네트워크 연계방식·인력운영계획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재외동포청은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입주를 통한 예산 효율성과 보안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 및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의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실질적 사이버안전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